

이명박-부시 제3차 정상회담 결과와 대북정책

박 영 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제3차 정상회담이 끝났다.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두 정부 아래서 뒤뚱거리던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시련을 맞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들어 그 성과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자들 모두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속성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대북정책과 연관하여 중요한 성과를 평가해보자.

먼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를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킬 것을 재천명한 점이다. ‘전략적’ 동맹관계란 최상위 수준의 동맹관계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물론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상호 협의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이다. 공동성명에 지적됐듯이 양자관계는 안보를 넘어서 포괄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우리의 국력에 부응하는 외교력의 신장을 말해준다. 동시에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의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건한 한·미동맹은 지정학적으로 구조적 제약요건을 안고 있는 한국이 국력에 걸맞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튼튼한 밑받침이 된다.

둘째,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와 관련 한·미 정책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미 공조는 대북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미공조가 빠져거렸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남한 당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지만, 그러한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자세에 의구심을 더하게 할 뿐이다. 신뢰 있는 한·미 공조는 평양의 워싱턴을 향한 구애의 손길은 먼저 서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동반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등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8월 11일로 예정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의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 여부와 연계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조속 해결 및 당국 간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셋째,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양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두 정권이 북한 인권에 침묵해 왔는데 이제라도 한·미가 공동의 보조를 맞춘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대북정책의 입안과 추진에는 전략적 요소가 동반한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소극적이며 패배주의적일 뿐이다. 북한 주민의 먹는 생존권을 주장하려면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의 문제 제기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조율의 의미를 갖는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한 측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다른 한 측은 특히 인권문제를 들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익숙해져온 일이다. 지난 정권 아래서 때로는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앞장서서 이분법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인식의 차이는 사고의 차이를 유발하고 사고의 차이는 전략과 대안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차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제3국의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북한권력자에게는 같은 민족이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고통의 굴레에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냉정하게 북한의 최고정책결정권자를 살펴보고,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아래서 그와 그를 둘러싼 소수의 지배집단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주의적 정책을 모른 채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북한적' 현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북한 주민을 그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견고한 한·미공조는 그러한 북한지도부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북한지도부는 그들이 '자랑하는' '공세적 맞받아치기' 전략으로 나오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에 초조해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